

제1회 TBT 워크숍을 마치고서



구 창 환

기술규제내분과
공업연구사
02-609-7126
koochr@mkeqckr

제1회 TBT 워크숍(2008.12.17)은 TBT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연구회에 참여하는 TBT 전문가와 평소 TBT에 관심을 가진 기업실무자 등 120여명이 함께 하였다.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내용과 중앙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무역기 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기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애가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말한다.

무역기술장벽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신규 무역기술장벽(TBT)이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하면서 수출업체의 내비기 시급한 실정이다.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되는 신규 TBT가 올해에는 작년의 1,030개에서 30% 증가한 1,300개에 달하며, 내년에는 세계적인 불황여파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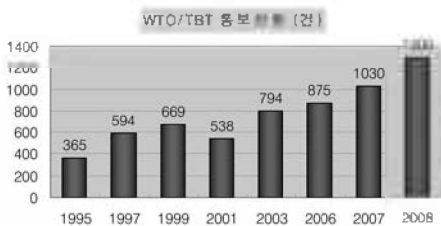
TBT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규제와 더불어 통관절차·원산지 규정 같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상의 무역장벽에 비해 TBT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시험인증,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술기준 및 표준의 변경 등 기술적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도 수월하지 않다.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TBT는 국제기구로부터 통제가 어렵고, 자국의 현실적 분제와도 연결되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은 물론, 미국 등의 선진국도 소비자 안전과 환경보호 같은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며 TBT를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 2009년 11월부터 제조 또는 생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품에 제3자 적합성 인증을 의무화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모든 수입제품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우리



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기술유출을 우려, 국제규범에 벗어나는 무역제한적인 조치라며 시정을 촉구함에 따라 일단 중국 측에서는 시행유보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국은 표면상으로는 안전과 환경, 소비자보호 등을 정책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 침체여파로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무역장벽은 언제 우리 수출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현안으로 떨지 모른다. 국내경제상황으로 보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의 두 배인 66%나 되는데 가뜰이나 힘들 것으로 보이는 수출전선에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정부자원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인각이 아쉬울 때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TBT'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협의에 찬 논의로 회의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고려대학교 장병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정부와 TBT 극복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TBT 해결여부의 독실은 기업에 돌아가는 것인 만큼 기업자원에서 의견과 분세점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알리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업종단체를 중심으로 동종 업계가 같이 참여하여 현안 TBT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기술기제 정보를 직접 입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세부내용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TBT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기업 CEO들이 TBT에 대한 실패나 성공사례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CEO 대상의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실무위원회, 연구회별로 모여 관심분야의 최근 TBT 동향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해외기술기제 내용 관련한 기업애로를 정부에 전달하여 양자 및 다자협상에서 의제화 하는 것, 자동차, 전자분야의 법안의 초기단계부터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무엇보다도 TBT 포털사이트를 확충해 관련 법률, 기술기제, 표준을 팩키지로 제공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급선부라는 의견으로 귀결되었다.

이번 워크숍 참석자들은 TB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장벽 대응체계 수립과 중장기 대응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논의된 의견들은 2009년 업무에 반영하고 중장기 TBT 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